

꼭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사회정의 모니터단은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명 ‘국회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만큼은 성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특권에 대해 모니터링 해온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사회정의 모니터단 대학생들이 논의하여 “꼭 내려놓아야 할 국회 ‘특권’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회 개혁을 이뤄내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혁

- ① 본인들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국회와 행정부 법령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세비를 수령하는 점 개혁
- ② 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 등 경비를 포함한 급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2.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보좌진 월급 상납 관행 근절

- ①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② 의원의 갑질 횡포로 19대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보좌진의 월급 상납 관행 근절

3. 국민소환제도 도입

-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 하지만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회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필요

4. 법 여겨도 처벌받지 않는 ‘탈법(脫法)’ 국회를 ‘준법(遵法)’ 국회로

- ① 헌법 또는 국회법 등 국회가 지켜야 하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탈법(脫法)’의 영역에 있는 국회를 ‘준법(遵法)’국회로 만들어야
- ② 법률의 자의적 해석, 입법 불비로 인해 형성된 특권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해 개혁돼야

5. 비윤리적 폭로·범죄의 ‘방탄(防彈)’된 면책 특권 폐지

- 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던 면책 특권이 의원들의 비윤리적 폭로·범죄의 ‘방탄(防彈)’으로 전락
- ② 헌법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 의원의 면책 특권을 축소·폐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정의 모니터단